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민환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뽑힌 버락 오바마는 우리 개념으로 말하자면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그의 출신성분을 살펴보면 그가 시민운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읽을 수 있다.

그의 가치관은 '공감'

그러나 그의 사람됨됨이는 뜻밖이다. 그는 강하다기보다는 유연하다.

'담대한 희망(The Audacity of Hope)'에서 그가 밝힌 바지만, 그는 그의 가치관의 핵심을 '공감(共感)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의 책에서 역지사지를 통해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밝혔다.

오바마한테서 배울 것

'역지사지(易地思之)'

그제 밤에 나는 TV토론을 시청했다. 여야 정치인이 한 치도 물러섬이 없이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며 자기주장만 강변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만난 부시에 대해 '호감이 가는 인물'이라고 책에 썼다. 부시 대통령이 기만하면서도 절도가 있고 솔직하다는 것이다.

NGO 칼럼

박영자



"아이고! 나를 무엇 때문에 살려 놓았다나?". 이는 최근 큰 머리와 팔에 게 갖다주려고 집 마당에 마늘 일곱 줍을 넣어놨는데, 누군가 집에 몰래 들어와 훔쳐갔다가 마취에서 깨어나 서럽게 우시던 여든넷의 고흥 할머니의 한 섞인 꾸밈이다.

MRI(자기공명영상법·magnetic resonance imaging) 검사결과, 연골이 다 닳아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이 필요

화려한 휴가

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화순 전남대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고관절이 부러져 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워 있던 고흥 할머니가 토해 낸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하다.

최근 농작물 절도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곤 한다. 수확기를 맞아 고흥할머니처럼 시골에서 피팍으로 일궈놓은 고추와 깨 마늘, 콩 등 농작물을 도선생들이 훔쳐가고 있는 것이다.

개 도둑을 막기 위해 개 목에 색을 칠하고 지역별로 농산물 겉포대에 색을 칠하고 연락처 등이 적힌 같은 색의 생산자 카드 등을 안에 넣어 도난방지책을 확실히 했다.

정책자금 늘리고 금리 낮춰 축산농가 숨통 터 줘야

양돈업을 하는 농가들이 사료값 폭등으로 죽을맛이라고 한다. '폐업 하느냐, 더 끌고 가다 파산하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을 정도로 압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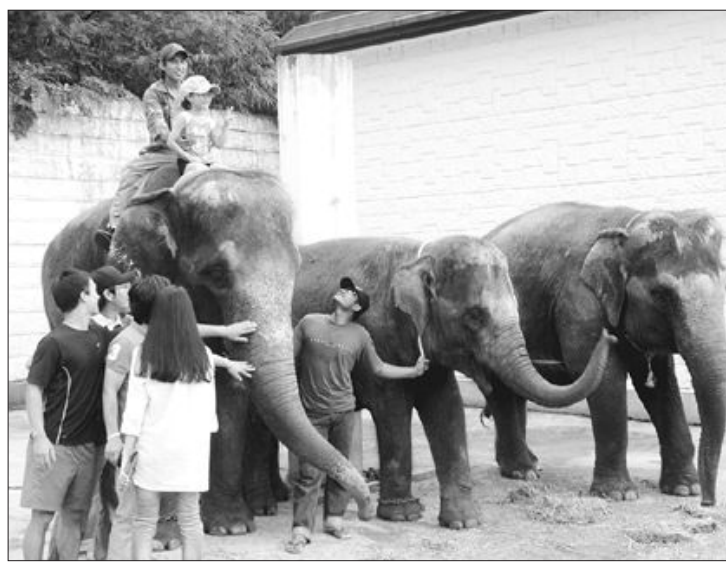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축산농가 지원 정책자금 금리를 선진국처럼 1%대로 내렸으면 한다.

정도인데 선진국들은 1%다. 지급처럼 힘든 시기에 정책자금 금리를 내리는 게 그나마 축산농가들의 숨통을 트어주는 지원 대책일 것이다.

▲황인희·광주시 동구 대인동



드디어 코끼리가 왔다



우리동물원에 드디어 코끼리가 나타났다. 정말 실어 올 때까지 긴가민가했는데 막상 데려다 놓으니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활활했다.

기 힘들어 멀쩡잡치 보던 코끼리를 봐는 달리, 만질 수도 있고 탈 수도 있다. 타는 것은 다소 돈이 들어가지만(1인당 5천원) 코끼리의 먹이와 조련사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최중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무리한 해외 선교활동 되레 반감 불러

보름 전 주말에 가족들을 데리고 필리핀 세부에 여행을 갔다.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 수속을 마친 뒤 공항문을 나서자마자 한국 주부 4명이 어깨에 띠를 두르고 서서 우리를 받기며 홍보물을 나눠줬다.

선교 활동은 나쁜 게 아니다. 종교적 자유가 있고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다.

다만, 선교활동을 하면서 우리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도 줄어든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시설

지자체 상습적 비리 근절대책 서둘러라

지방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서 해마다 똑같은 형태의 불·탈법 행위가 적발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옛그제 3개 분야 23개 항목의 '자체감사 결과 반복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불·탈법행위를 지적한 것이다.

불·탈법은 인사와 공사, 예산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다. 공무원의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았는데도 표창 추천 대상자로 선정하는가 하면 계약업체나 보조사업 지원단체의 경비로 해외여행을 하기도 했다.

지원하는 사례도 비밀비재하다. 반복된 지적사항이 이 정도인데 일회성 비리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자치단체의 불·탈법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부를 수밖에 없다. 선진사회나 세계 7대 강국 구현을 아무리 외쳐도 공직자들이 세금을 주머니돈으로 여기고 공사로조차 구부리지 못하는 풍토가 당연한 결과이다.

상급기관의 감사 결과마저 수용되지 않는 현실이 한심하다. 자치단체의 상습적 비리를 방치하면 피해는 주민들이 보게 된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그쳐선 안된다

정치권의 오랜 화두인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현재 3~4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키로 했고 한나라당이 공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현재 지방행정체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 100여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로 현실 생활권과 맞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다.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일인만큼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행정체제를 개편해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 서비스를 강화한다는데 반대할 이 유는 없다. 경제하는 것은 당리당락에 치우치거나 공무원의 자리 보전에 따른 반발이다.

無等鼓

지난해 말 겨우 울려놓은 1인당 국민소득(GNI) 2만달러가 최근 다시 1만달러대로 내려앉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인당 국민소득은 먼저 원화로 계산하는 국민총소득에, 당시의 환율을 적용해 달러로 환산한 값을 추계인구로 다시 나눠 산정한다.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의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에 따라 통계수치만 이처럼 오르내린다.

최근 유엔의 실크벨트 크인 유엔 밀레니엄 프로젝트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제시한 '2017년 한국상황에 대한 예측조사' 결과, 앞으로 10년 정도 지난 2017년 우리의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소득의 진실



이러는 의미이다. 최근 유엔의 실크벨트 크인 유엔 밀레니엄 프로젝트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제시한 '2017년 한국상황에 대한 예측조사' 결과, 앞으로 10년 정도 지난 2017년 우리의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information.